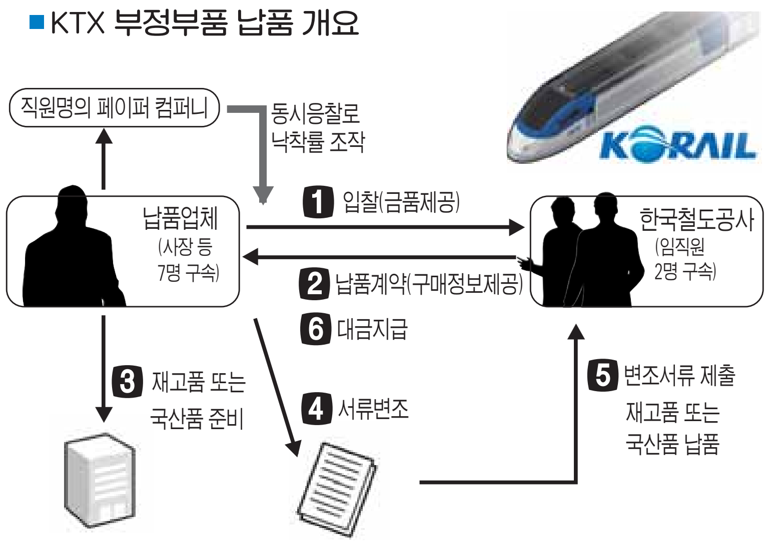
‘짝퉁 대한민국’ 국가 기간시설이 더 불안하다

검찰 수사로 드러난 KTX 납품비리 실태

문서위조·관리 허술·뇌물 … 원전비리와 ‘판박이’

사기 부품 장착된 차량들 파악 어려워 더욱 불안

■KTX 부정부품 납품 개요



“이것이 짝퉁” 15일 신응석 광주지검 특수부장이 수입신고필증을 위조·변조하는 방법으로 KTX에 납품된 부품들을 설명하고 있다. 납품업체 6곳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9개 품목 1만7521개 부품을 ‘사기 납품’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원전 납품 비리 사건과 관련 정부는 이를 근절하겠다며 지난 10일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닷새 뒤인 15일 검찰이 KTX도 이와 유사한 납품 비리가 있었다고 발표하면서 납품 비리가 비단 원전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자칫하면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이 같은 국가기간시설에도 위조·변조 부품이 수년간 별다른 규제 없이 납품됐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전과 유사한 비리 구조=한빛원전에 대한 수사를 상당부분 마무리한 광주지검 특수부(특수부장 신응석)는 부품이 모두 수입품인 KTX도 유사한 비리가 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 사전 조사 단계에서 코레일 역시 원전과 같이 업체로부터 품질보증서와도 같은 수입신고필증 사본을 제출받는데, 이 사본의 수치나 글자를 조금씩 위조할 경우 이를 판독해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코레일이 지난 2003~2004년까지 프랑스 알스톰사로부터 인수한 46편성(920량)에 부품을 납품한 137개 업체로부터 1629건의 수입신고필증을 건네받아 분석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코레일에 제출한 수입신고필증 기재 부품 수량과 실제 세관 신고 수량이 다른 점이 드러났다. 영세업체들이 수입신고필증을 스캔한 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를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국내산 부품을 외국산 순정품으로, 재고품을 신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것이다. 코레일이 실제 수입신고 내역까지 살펴보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셈이다.

검찰에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업체들로, 주요 핵심부품이 아닌 수익률이 낮은 일부 부품에 대해서만 수입하면서 그나마 비리의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핵심부품은 코레일이 직접 알스톰사로부터 수입하거나 직거래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국내 부품이나 재고품의 경우 KTX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부품의 교체주기를 단축시켜 전반적인 운영비용 상승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문제 부품 쓰인 차량 찾지 못해=원전과 마찬가지로 코레일 역시 허술한 부품 관리·감독이 비리를 키운 결과를 초래했다. KTX는 알스톰사가 설계·제작해 대부분 수입 부품이 쓰임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들의 수입신고필증의 원본과 사본을 대조하는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요 부품에 대한 사용 이력 관리체계가 구축 안 돼 납품된 부품들이 어느 곳에 장착됐는지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부품의 정비 및 교체 시기도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된다는 의미다. 또 부품의 입찰 및 납품 과정에서 일부 코레일 직원들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실도 드러나면서 이번 KTX 부품 납품 비리는 원전비리와 ‘판박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업체들의 위조·변조 납품, 해당 기관의 허술한 관리·감독, 일부 직원의 뇌물수수 등이 얽히고 설켰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부품에 대해서 업체들이 죄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직원 비리는 수사 과정에서 수상한 금전이 오간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본 것이다”고 말했다.

◇“다음달 1일부터 KTX 특별점검”=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해줄 것을 코레일에 건의했다. 특히 KTX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 이력 관리 시스템 보완을 강조했다.

코레일은 이날 별도의 자료를 내고 “부정부품을 조만간 순정품으로 교체하도록 하겠다”며 “안전운행에 빈틈이 없도록 납품절차도 개선하겠다”고 해명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실제 수입신고 내역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고 납품업체가 미리 해외에서 사들여 보관한 제품과 신품을 섞어 납품하면 볼트, 너트 등은 수입과 국산을 육안으로 판별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은 다음달 1일부터 프랑스 전문가 등을 투입해 모든 부품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사기 부품’ 재고를 모두 폐기하는 것은 물론 비리가 드러난 임직원 2명은 직위해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여금지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경제민주화·4대강 감사 공방

12개 상임위 이틀째 국감

국회는 15일 정무위, 법제사법위, 외교통일위, 환노위 등 12개 상임위 소관부처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이틀째 국정감사를 벌였다.

여야는 이날 국감에서 경제민주화,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4대강 사업의 대운하 추진 의혹, 남북관계 해법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특히 이날 정무위에서는 최근 대리점주 폭언논란에 휩싸인 아모레퍼시픽의 손영철 사장을 비롯해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박기홍 포스코 사장, 김충호 현대차 대표, 김경배 현대글로비스 사장, 백남육 삼성전자 부사장, 배중호 국순당 사장 등 19명의 기업인이 증인으로 출두하는 등 전체 상임위에 30명이 넘는 기업인 증인들이 출석, ‘기업국감’이란 말까지 나왔다. 아모레퍼시픽의 손 사장은 ‘갑을관계’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았고, 삼성전자서비스 박 대표는 AS 중고부품을 새부품으로 속여 팔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무위에서는 또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이행 의지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공정위가 LG의 위장계열사 신고 누락을 경고 처분해 ‘재벌 봐주기’ 행태를 보였다”면서 “겉으로는 경제민주화를 말하면서 속으로는 재벌 봐주기, 청와대와 코드 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은 “경제민주화와 성장을 위한 민간기업의 활력을 되찾는 일이 일정 부분 충돌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접점을 찾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 감사결과를 놓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금 뭐라고 해도 4대강 사업은 4대강 대운하 사업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사기극이자 감사원이 일으킨 관재(官災)”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대운하의 전초작업으로 내부적으로 결론 내리고 자료를 짜깁기하였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4대강을 대운하로 바꿔 추진한 것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지만 모두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느냐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수엑스포도 대전엑스포처럼…

선투자금 중 상환 못한 3846억 사후활용 위해 재투자해야”

민주당 김영록 의원

지난해 여수세계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정부가 선 투자한 자금(4846억원) 중 아직 여수세계박람회 재단이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3846억원을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93년 대전엑스포 폐막 후, 현물 3000억원과 현금 642억원을 정부가 회수하지 않고 재투자했던 것처럼 여수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해 선투자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 실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정부의 사후 활용 계획이 시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선투자금 회수를 위한 매각중심으로 되어 있어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국내외 유망기업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거 동일한 인정박람회였던 대전박람회이 경우 지난 1993년도 잔여자산을 무상으로 재단에 양여했다”며 “여수박람회도 정부 선투자금 3846억원을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두 차례의 매각 추진과정에서 전문가 및 투자의향기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는 박람회장 조기 매각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박람회재단의 자체 수입이 연간 30억원 내외임을 감안할 때 조기상환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매각중심의 사후 활용은 투자유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임대 등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종두

뻔한 소리 또 나온다